

한일의 미래, 수평적 관계에 입각해서 대응

* 이 자료는 기무라 칸(木村 幹) 고베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(한일의 미래, 수평적인 관계에 입각한 대응('15.6.3)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기본조약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골은 1990년대 이후 심화
- 한국이 현실적인 외교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희박
-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일본의 추월할 가능성도 있음

□ 단기적인 한일정부간 관계 악화 이상으로 한일관계 정체

- 한일 기본조약과 일련의 부속 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 기념일인 6월 22일을 전후하여 한일 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나 고조된 분위기는 아님
- 최대 이유는 현재 한일관계의 정체임
 -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조차 개최되지 않고 있음
 -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아 한일 FTA 등 양국 간 많은 현안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,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
- 한일 기본조약 체결 50주년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이벤트가 침체된 이유는 반드시 한일 양국 정부 간 단기적인 관계악화에만 있는 것은 아님

□ 한일기본조약체제에 대한 한일의 이해 변화

-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양국에서 이 조약과 이에 의해 확립된 「한일기본조약체제」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임
-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과거사문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모두 해결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반면, 한국에서는 이 같은 견해는 공유되고 있지 않음
 -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이후 한국 정부는 종군 위안부, 원폭피해자,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등 3가지 사안에 관하여,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여 한일기본조약체제 밖에 두고 있음

- 이 점에 대해 보다 강경한 것은 한국의 사법부임
 - 징용근로자를 둘러싼 판결에서 한국 사법부는, 외교문서에 나타나 있듯이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고려되었음이 틀림없는 전시 하 근로자 동원 문제에 대해서조차도, 한일기본조약에서 최종적인 해결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
 - 이 같은 한국 사법부 판단은 여론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, 한국 행정부는 스스로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결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 있음

□ 종군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

-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싼 양국 간 골이 1965년 조약체결 당시부터 깊어진 것은 아님
 - 1980년대까지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 마찬가지로,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는 모두 한일 기본조약 및 그 부속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났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
- 한국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1992년 종군 위안부 문제가 격화된 이후임
 - 종군 위안부 문제가 돌파구가 되어,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 후도 조약의 규정과,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정부로부터의 직접배상을 요구하는 여론과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음
- 분명한 것은 지난 50년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한국 측의 자세가 변화해왔다고 하는 점임
-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측의 변화요인을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에서 찾는 것은 적절치 않음
 - 왜냐하면 적어도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은 식민지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수이면서도 한일 기본조약에 관한 이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바, 문화적 특성으로는 이 같은 1980년대 이전의 「안정적인 상태」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임
- 따라서 1980년대 이전의 「안정적인 상태」를 붕괴시킨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후 한국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음

□ 한국 측의 변화 배경으로서 대일의존도 저하

- 과거에도 몇 번인가 언급한바 같이,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점을 들 수 있음
- 50년전 한일 기본조약 체결당시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개도국으로서 경상수지도 큰 폭의 적자상태에 있었음
- 남북 분단 하에 극도의 군사적 긴장에 직면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일본과의 협력 없이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웠음
-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도 요구수준을 크게 낮춰야만 했음
- 이와 같은 한국 측에서 본 한일 기본조약과 이에 따른 한일 기존조약체제는 당시 비대칭적인 한일관계 속에서 본의 아니게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당초부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이 같은 기본조약체제를 감수했던 이유는 비대칭적인 한일관계가 그 후도 상당기간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임
 - 즉 당시 한국은 이 체제에 대하여 불만의 뜻을 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
-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냉전이 종식될 무렵 바뀌었음
 - 즉, 대일의존도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낮아진 결과 한국은 스스로의 불만을 정면으로 일본에 표출할 수 있게 되었음
 - 그 최초의 증표의 하나가 1990년대 종군위안부 문제이며, 이후 한국의 정부와 여론은 국력강화에 맞추어 조금씩 일본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게 되었음

□ 한일 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

- 현재와 같은 상황의 배후에 있는 것은, 과거에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한일 양국이, 국제환경 변화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임

- 이와 같은 설명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
 -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력은 일본에는 크게 미치지 않으며, 한일관계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로 된 것은 아님
 -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외교로 돌아와야만 하며 또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임
- 그러나 한일관계의 현상은 많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상황보다도 크게 변하고 있음
 - 일본의 1인당 GDP는 명목기준으로 현재 세계 27위, 한국은 31위, 그리고 한일 양국 간 경제수준의 접근은 양국의 경제관계 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
 -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양국의 군비지출 상황으로, 중국에만 주목되었던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실은 한국의 군비지출도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
- 주목해야할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군비확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임
 - 북한의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은 이전부터 분명히 많은 경제적인 자원을 군비에 충당하고 있으며, 그 수준은 GDP대비 3%에 조금 못 미침
 -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방위비는 GDP대비 1%로 거의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, 양국의 GDP 전체의 격차가 1대3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,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군비지출 비율을 낮추지 않는 한, 금액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일본을 상회하게 될 것임
 - 현재 양국의 인구비가 현재 1대3으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상회하기 전에 일본의 군사비가 한국에 추월되는 날이 올 가능성도 있음

□ 한국의 변화와 한일 간 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필요

-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임
 -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과 더불어 「커진 이웃 한국」을 쓸데없이 적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득책이 아님

- 지난 50년간 구조적인 변화를 겪은 지금, 한일관계가 과거와 같은 밀월관계로 돌아오기는 어려움
- 그렇다고 한다면,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양국 간 대립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만 전념하는 것이 중요
 - 쓸데없는 발언으로 한국을 도발시키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여 하나하나의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에게 요구되는 것임

□ 시사점

-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의 변화됨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간 협력에 대한 양국의 이해와 발상 및 대응논리 등을 이에 맞게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임
- 특히 양국관계의 변화 이전 부의 산물을 변화 이후 플러스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한일 양국에 모두 필요함. 끝.